

## 서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

임혜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연구는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5개국의 비교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발전모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나눌 수 있는 시기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전후로 발전모델의 유용성 및 발전모델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그 위기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소 적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정치경제 질서 변화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해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전환 및 세계화의 재균형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미 신자유주의의 변용을 겪은 동아시아 각국들은 다시 한 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과정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기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기세가 꺾이면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새로운 질서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긴 힘들지만, 세계는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대한 정치사회적 대항으로 일어난 포퓰리즘의 기세로 몸

살을 앓고 있다. 포퓰리즘은 강한 국가, 강한 지도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역할이 외관적으로 유사한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적인 요소와 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둘째, 2008년 이후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응은 본격적인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를 열었다.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뚜렷해지는 한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대안모델로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 등 자본주의 발전노선을 둘러싼 이념경쟁의 양상도 증가하고 있다. 미중 패권갈등으로 인하여 미중 간 글로벌 공급망이 재구축됨에 따라 각국은 핵심기술의 영역에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는 거대 IT 플랫폼 기업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ESG 규범을 중시함에 따라, 시장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 시계추는 다시 한 번 국가로 회귀하고 있다.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방식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되었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이어 기술변화의 확산과 수용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 및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른 충격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더욱 크게 가해지며, 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 및 악화된 불평등 현상은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위기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급적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국가들을 사례로 선택했다. 일본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역사적 원형으로 기능해 왔고, 한국과 대만은 전형적인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맞는 사례다. 중국과 베트남이 동아시아 발전모델로 적용가능함에 대한 학자적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들 국가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례에 포함시켰다.

5개 국가의 사례분석 결과,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기본적인 속성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화와 연속성의 궤적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단지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로는 혁신산업에 대해서 산업정책적 개입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발전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만의 발전모델은 한편으로 국가기구와 관료 응집력, 국가-기업 간 협력적 연대네트워크 약화 등 일부 핵심적 요소에서 변화를 겪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와 민주화라는 대내외적 변화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위한 발전정향과 금융안정성 유지 등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지속되어 왔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변화의 압력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2년 자민당의 재집권 등 국내외적 위기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일본 발전모델 또한 연속성과 단절의 이중 동학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발전모델의 속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기본적 속성을 상당 부분 공유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특수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진핑 정부의 발전 모델은 발전국가보다는 국가자본주의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발전모델은 발전국가의 지향성과 지대추구적 정실 자본주의의 성격이 혼합된 혼종적 레짐이며, 시장-레닌주의 체제로서 시장 이행 과정에서 재구성된 공산당의 이념, 정치 논리, 분파투쟁상의 중첩된 모순성이 그러한 혼종성이 두드러진 발전모델을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